'얌체' 기초수급자 솎아내기 애꿎은 조부모가정 등 피해

일제정비 허점…탈락자·지원금 감소 부작용

정부와 각 지자체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인 '행복이음망'의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면서 정작 조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등이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지원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수입이 있으면서도 지원받아온 '얌체' 수급자를 솎아내기 위해 실시됐으나, 법적인 가족관계의 수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끊겼거나 실제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수입까지 파악되는 바람에 탈락대상자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3일 "지역 내 6만6000명의 수급자 중 10%인 6600여명이 이번 정비를 통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지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과거 연락이 안 됐던 부양의무자가 전산망에 수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급여 중지, 감액 조치 등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비의 피해가 고스란히 조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일 고등학교 2학년인 A(17)군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외할머니와 살아왔고 재혼한 어머니와도 연락이 안 되는데 갑자기 아무런 통보 없이 정부지원금이 줄었다"며 "알고 보니 아버지가 돈을 벌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며 하소연하는 등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는 비슷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동구청에 A군을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나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수급비가 지원되는 다음달부터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거나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경우 등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갑자기 지원을 끊거나 줄이게 되면 기존 수급자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구제 대상을 파악하고 법·제도의 정비와 민간후원단체와의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급비 지급부터 휴대폰 전화요금 감면까지 40여 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광주시는 올해 수급비와 의료급여 지원 등에 모두 3500억원의 예산을 수립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확인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3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경제정책과 직원들이 각화동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음주운전 단속 0.03%부터

시속 40㎞ 초과시 범칙금 두배 인상

국토부 시안 발표

과속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대폭 오르고, 야간 보행 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가 밝아지는 등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2012~2016년)'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할 전망이다.

기준속도가 시속 40㎞ 초과될 경우 범칙금이 두 배 인상되고, 시속 60㎞를 넘어서면 면허가 정지·취소 처분되며, 음주 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현행 0.05%)로 강화된다.

또한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구역이 확대되고, 야간 보행자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조명시설도 강화된다.

아울러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도 현재에서 약 두 배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밖에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등·하교하는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를 양성하고, 전국 169개 도시철도 역사에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 이송 체계 선진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남도교육청 일반직 566명 인사

행정지원국장 한택희

목포도서관장 김재원

전남도교육청은 23일 한택희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에 승진, 임명하는 등 7월1일 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3급인 목포공공도서관장에는 김재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이 승진, 발령됐다. 〈명단 18면〉

이혁신 사학담당과 이용상 직업교육정보담당, 여민구 용도담당 등 3명의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 각각 도의회수석전문위원, 학생문화회관과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으로 임명됐다.

공로연수에 들어간 최원섭 국장의 후임으로 관심이 쏠렸던 행정지원국장에는 한택희 총무과장이 임명됐다.

5급 사무관에는 목포여고 강동식 행정실장 등 3명이 승진했으며 서정일 고흥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이 광양청 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23명이 전보발령됐다.

6급 이하는 일반직이 승진 63명, 전보 171명 등 236명, 기능직은 승진 110명, 전보 110명 등 285명으로 모두 566명이 인사 발령됐다.

도 교육청은 4급 이상 고위직은 업무추진 능력, 민주, 청렴성 등을 고려했으며 5, 6급은 근무평가 서열과 본인희망,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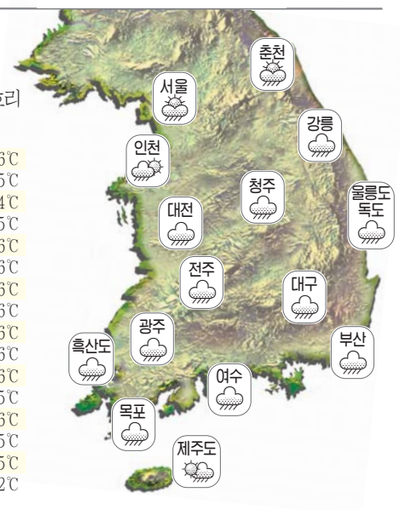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19분 / 해짐 19시 51분 — 달뜸 00시 14분 / 달짐 13시 17분

본격 장마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2/26℃
목 포	흐리고 비	22/25℃
여 수	흐리고 비	21/24℃
나 주	흐리고 비	22/25℃
완 도	흐리고 비	23/26℃
구 례	흐리고 비	23/26℃
강 진	흐리고 비	22/26℃
해 남	흐리고 비	22/26℃
장 흥	흐리고 비	23/26℃
순 천	흐리고 비	23/26℃
영 광	흐리고 비	22/26℃
진 도	흐리고 비	22/25℃
전 주	흐리고 비	22/26℃
군 산	흐리고 비	21/25℃
남 원	흐리고 비	22/25℃
흑산도	흐리고 비	19/2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2.0~3.0m
먼바다	남서~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남서	1.5~2.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높음

	밀물	썰물
목포	07:44 / 20:36	00:52 / 13:34
여수	02:19 / 15:30	09:06 / 21:17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날 씨						
최저/최고	22/27	21/25	21/27	21/28	22/29	23/28

대법 "야간옥외집회 과거 사건도 무죄"

과거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을 위반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형벌조항은 단순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효력상실이 소급되기 때문에 과거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신고 없이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개선 입법이 되지 않아 작년 7월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지만, 이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마찬가지여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효력상실이 과거로 소급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 중 야간옥외집회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